(가칭) 김지태위원장 석방!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반전평화!

각계 000인 선언

제 / 안 / 서

1. 제안 취지

정부와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미군기지 확장예정지 285만평 중 260여만평에 장애물과 철조망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을 유린하였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불법적인 검문과 통행제한은 주민들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인권침해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에는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자진 출두한 김지태위원장에게 유례없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법적 폭거가 자행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국방부의 야만적인 탄압은 오히려 주민들과 시민사회진영의 분노만 가중시킬 뿐이며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핵시험 이후 조성된 긴박한 정세는 6자회담의 제개로 일면 완화되었으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문제는 비단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따른 것이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개입에 따라 전쟁당사국이 되고, 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지태위위장을 잡아 가둔채 대화를 운운하고 한편에서는 야만적인 고사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와 국방부의 작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며 평택의 미군기지가 확장되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생존권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의 평화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선언을 통해 김지태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실현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2. 행사 개요

1) 사업 취지

- 정부의 야만적인 주민탄압과 고사작전으로 고립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민주,양심 세력들의 힘을 모아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의 여론을 모아내고 지속하기 위함.

- 김지태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사회여론화 하고 각계각층 인사들의 목소리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함.

- 당면한 정세를 반영하여 반전평화의 내용으로 폭넓은 각계각층, 해외인사를 망라하여 대북제재 중단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함.

- 일회성 선언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을 넓혀 가면서 후속 사업을 전개
  (예) 가칭) '2007년 한반도 평화선언')

2) 사업 개요

- 제목: (가칭) 김지태위원장 석박!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반전평화!
  각계 000인 선언
- 기간 : 2006년 11월 24일(목) ~ 12월 6일(수) 까지
- 발표 : 12월 8일경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 주최 : 각계 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 주관 : 평택범대위

3) 준비일정

- 12월 6일까지 선언 참가자 명단 확정 (ufo-01@hanmail.net 로 명단 취합)
- 12월 7일까지 기자회견 참가자 확정
- 12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 발표

4) 추진방안

- 각계 대표자를 중심으로 선언자를 조직하고, 향후 폭을 넓혀서 후속사업 전개
- 평택범대위 참가단체 대표자 기본 조직
- 각계 상징적인 명망가를 특별히 조직
- 영역별 선언대상자 및 담당 책임자 선정 (공동집행위원장)

○ 민중,통일 :	○ 시민사회 :
○ 여성 :	○ 종교 :
○ 문화예술 :	○ 정치권 :
○ 법조계 :	○ 학계 :
○ 개별인사 :	○ 해외인사 :

□ 김지태위원장 석방!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반전평화!
각계 000인 선언문(초안)

죄없는 주민대표 김지태위원장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김지태위원장은 정부와 국방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묵살한 채 생명과도 같은 삶의 터전인 땅을 빼앗고 대대로 지켜 온 주민공동체를 파괴한 것에 저항한 죄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수백만평에 달하는 농지에 장애물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불법적인 검문과 통행제한으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추분교 파괴에 이어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까지 자행한 정부와 국방부의 야만적인 폭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권력을 앞세운 정부와 국방부의 부당한 국가폭력에 저항한 김지태위원장과 주민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한 행동이자 권리입니다. 더구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당국이 주민대표인 김지태위원장을 구속하고 실형까지 선고한 것은 가족과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기만한 행위입니다. 김지태위원장을 계속 가두어 놓는 것으로 주민들의 투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들은 3년이 넘도록 온갖 회유와 협박, 공권력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생명과 평화의 땅을 지키며 800일이 넘도록 희망의 촛불을 밝혀온 분들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탄압은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방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일체의 탄압행위를 중단하고 주민대표 김지태위원장을 조속히 석방시켜야 합니다.

평택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따른 침략전쟁의 전초기지입니다.
불합리한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전면 재협상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동의없이 미국이 요청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정책에 동조하고 나서 한미간에 합의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미군기지이전협정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대북전쟁억지력이라는 명분마저 팽개치고 미국이 벌이는 전쟁을 위해 전세계로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명백히 성격이 바뀌었으므로 평택미군기지이전 협상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재조정' 관련 현안이 논의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 내용은 미8군사령부의 해체 혹은 축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지상군의 감축 등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규모를 3만 7천명에서 2만 5천명까지 축소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더 나아가 많은 군사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상군 규모가 1만 5천명 선까지 추가감축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미양국은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이전의 성격, 비용부담, 기지 규모 등 평택미군기지확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북핵문제는 제재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제재, 강경정책에 맞선 북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으로 치닫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지금이야 말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미군기지확장이 완료된다면 결국 유사시 대북선제공격의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행이 6자회담이 제개되면서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고, 최근 북미 간의 접촉이 이어지면서 '북핵폐기와 평화협정' 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점이 거론되고 있는 사실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재와 대화'는 어떤 경우에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면 지금 즉시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미 양국은 6자회담 이든 북미간 직접대화 이든 성실한 대화를 통해 북미 사이에 오래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근본적으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의 비핵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006년 12월 8일

김지태위원장 석방!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반전평화!
각계 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